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 본 최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변화

정성미·정재우\*

## I. 머리말

통계청은 지난 5월 말 2014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 2회 조사되지만 조사월이 3월과 8월로 달라 이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7년 이후 실시된 3월 조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규모와 구성의 변화를 분석하고 임금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시간제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함에 따라 비정규직 내 근로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데 집중해 분석하고, 인적특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의 추세적 변화에 따라 임금과 상대임금격차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했는지도 분석하도록 한다.

## II. 비정규직 규모와 구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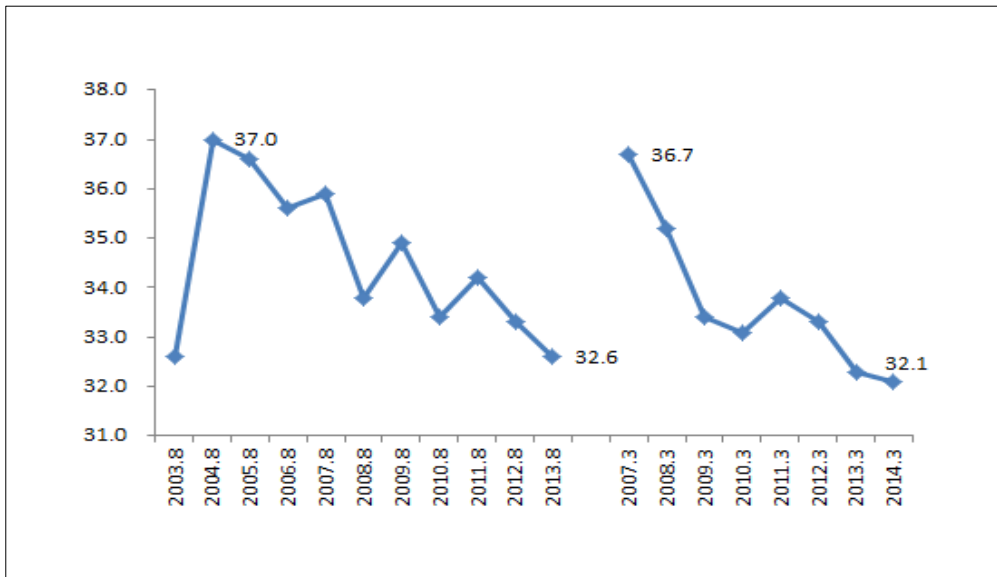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매년 3월 추가조사를 실시한 2007년 이래 비정규직 비중은 2014년 32.1%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는 2003년 이후 8월 조사 기준으로 보더라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그림 1 참조).

2013년 하반기 이후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2014년 3월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해 증가규모가 654천 명에 달했고, 임금근로자 증가분 가운데 정규직은 474천 명, 비정규직은 179천 명 증가했다. 비정

\* 정성미=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mjung@kli.re.kr), 정재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jungx315@kli.re.kr).

[그림 1] 비정규직 비중 추이

(단위 : %)



주: 임금근로자 중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규직 증가규모는 예년에 비해 적지 않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임금근로자 증가폭이 워낙 컸던 영향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소폭 감소한 것이다.

세부 근로형태를 보면, 한시적 근로의 경우 2014년 3월 임금근로자의 18.5%를 차지하며 추세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비전형 근로도 한시적 근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2014년 3월 11.7%를 기록해 두 근로형태 모두 2007년 조사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시간제 근로의 경우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3월 임금근로자의 10.4%를 차지하여 200만 명에 육박하는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정규직 내의 구성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림 2]를 통해 비정규직에서 각 근로형태가 차지하는 비중 추이를 보면, 비정규직의 상당수를 차지하던 한시적 근로는 2007년 3월 63.1%에서 2014년 3월 57.5%로 줄어들었고, 비전형 근로는 2007년 3월 38.9%에서 2014년 36.4%로 감소했다. 반면, 시간제 근로가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1.3%에서 2014년 3월 32.4%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시간제 근로 규모가 비전형 근로 규모를 추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표 1〉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구성 추이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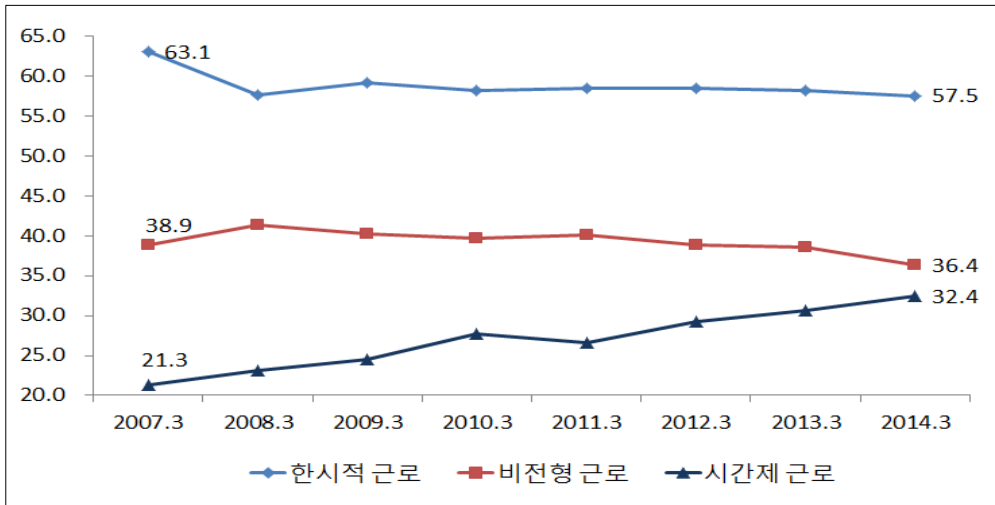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근로	비전형 근로	시간제 근로
2007. 3	15,731	9,958 (63.3)	5,773 (36.7)	3,642 (23.1)	2,244 (14.3)	1,232 ( 7.8)
2008. 3	15,993	10,356 (64.8)	5,638 (35.2)	3,249 (20.3)	2,330 (14.6)	1,301 ( 8.1)
2009. 3	16,076	10,702 (66.6)	5,373 (33.4)	3,179 (19.8)	2,165 (13.5)	1,316 ( 8.2)
2010. 3	16,617	11,119 (66.9)	5,498 (33.1)	3,202 (19.3)	2,178 (13.1)	1,525 ( 9.2)
2011. 3	17,065	11,294 (66.2)	5,771 (33.8)	3,370 (19.7)	2,311 (13.5)	1,532 ( 9.0)
2012. 3	17,421	11,612 (66.7)	5,809 (33.3)	3,394 (19.5)	2,260 (13.0)	1,701 ( 9.8)
2013. 3	17,743	12,012 (67.7)	5,732 (32.3)	3,331 (18.8)	2,208 (12.4)	1,757 ( 9.9)
2014. 3	18,397	12,486 (67.9)	5,911 (32.1)	3,401 (18.5)	2,150 (11.7)	1,917 (10.4)

주: ( )안은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3월.

〈그림 2〉 각 근로형태가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3월.

한시적 근로자를 세부 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기간제와 기대불가능 규모와 비중 모두 소폭 감소한 반면, 반복갱신은 2012년 수준으로 증가했다(표 2 참조). 기간제 근로는 한시적 근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우 커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근로형태이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가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6.6%에서 금융위기를 거치며 크게 감소했고, 2010년 이후 14%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한편 호출근로와 매우 유사한 수준의 근로조건을 보이며 모든 근로형

〈표 2〉 한시적 근로의 세부 형태별 고용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기간제	반복갱신	기대불가
2007. 3	2,614 (16.6)	547 (3.5)	481 (3.1)
2008. 3	2,293 (14.3)	229 (1.4)	727 (4.5)
2009. 3	2,560 (15.9)	23 (0.1)	596 (3.7)
2010. 3	2,389 (14.4)	326 (2.0)	487 (2.9)
2011. 3	2,465 (14.4)	461 (2.7)	444 (2.6)
2012. 3	2,554 (14.7)	411 (2.4)	429 (2.5)
2013. 3	2,594 (14.6)	249 (1.4)	488 (2.8)
2014. 3	2,588 (14.1)	410 (2.2)	402 (2.2)

주: 1) (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중.

2) 반복갱신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반복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형태의 근로이고, 기대불가는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고용이 지속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3월.

태 가운데 가장 일자리 질이 좋지 않은 기대불가는 2013년 대비 소폭 감소해 402천 명 (2.2%)을 기록했다.

반면, 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근접해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좋다고 볼 수 있는 반복갱신은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시기에 따라 증감 폭이 매우 크게 움직이는 것이 관찰된다. 반복갱신은 비정규직 내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 근로 형태가 변화하는 정도에 따라 비정규직 전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다. 2014년 3월 반복갱신의 규모는 410천 명으로 2013년 3월 대비 161천 명이 증가해 임금근로자의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수준으로 회복했다.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계약 기간별로 구분해 추이를 보면, 1개월 미만 계약한 초단기 기간제의 근로자 수와 비중이 2007년에서 2010년까지 가파르게 감소하다가 이후 6%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3 참조). 2014년 3월 1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162천 명 (6.3%)을 기록했다.

한편 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계약한 기간제 근로는 2008년 이후 꾸준히 30%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다시 빠르게 증가하여 2014년 3월 기간제의 35.0%를 차지하며 906천 명을 기록했다. 2007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 기간제 근로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잡은 고용계약 기간 1년 기간제는 2011년 51.1%로 정점에 도달했으며, 이후 규모와 비중이 감소하여 2014년 3월 기간제 근로자의 45.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계약 기간별 추이

(단위: 천 명, %)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2007. 3	615 (23.5)	722 (27.6)	850 (32.5)	427 (16.4)	0 ( 0.0)
2008. 3	394 (17.2)	698 (30.4)	799 (34.9)	351 (15.3)	51 ( 2.2)
2009. 3	350 (13.7)	867 (33.9)	942 (36.8)	320 (12.5)	81 ( 3.2)
2010. 3	154 ( 6.4)	804 (33.6)	1,171 (49.0)	227 ( 9.5)	34 ( 1.4)
2011. 3	151 ( 6.1)	775 (31.4)	1,260 (51.1)	239 ( 9.7)	41 ( 1.6)
2012. 3	162 ( 6.3)	834 (32.7)	1,270 (49.7)	225 ( 8.8)	63 ( 2.5)
2013. 3	152 ( 5.9)	854 (32.9)	1,284 (49.5)	225 ( 8.7)	78 ( 3.0)
2014. 3	162 ( 6.3)	906 (35.0)	1,185 (45.8)	258 (10.0)	77 ( 3.0)

주: ( )안은 기간제 근로자 중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3월.

반면,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하인 비중은 2007년부터 추세적으로 감소해 2013년에는 8.7%를 기록했고, 2014년에는 약간 상승한 10.0%로 나타났다. 3년 초과로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그 수가 그리 크지는 않다.

<표 4>는 비전형 근로의 세부 형태별 규모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파견근로는 2014년 3월 임금근로자 중 0.9%를 차지하며 167천 명으로 나타났는데, 2011년 이후 200천 명을 밑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용역근로 역시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규모도 700만 명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특수고용은 규모가 추세적인 감소를 하고 있는데, 2007년 643천 명(4.1%)에서 2014년 551천 명(3.0%)으로 규모와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가내근로는 규모가 소폭 증가했으나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형 근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일일근로는 2007년 915천 명에서 2014년 789천 명으로 추세적인 감소를 지속하며 임금근로자의 4.3%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비정규직 근로형태 구성 변화의 중심은 단연 시간제 근로이다. 조사 이래 빠르게 증가할 뿐 아니라 증가 규모도 커 비정규직 증가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비정규직은 179천 명이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시간제 근로는 160천 명이 증가했다.

기존의 시간제 근로 연구를 보면, 최근 시간제 근로 증가의 상당부분은 여성에 의한 것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15~24세, 55세 이상 고령층에 몰려있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표 4〉 비전형 근로의 세부 형태별 규모 추이

(단위: 천 명, %)

	파견	용역	특수고용	가내근로	일일근로
2007. 3	175 (1.1)	584 (3.7)	643 (4.1)	155 (1.0)	915 (5.8)
2008. 3	172 (1.1)	617 (3.9)	601 (3.8)	151 (0.9)	940 (5.9)
2009. 3	131 (0.8)	576 (3.6)	632 (3.9)	69 (0.4)	854 (5.3)
2010. 3	212 (1.3)	550 (3.3)	589 (3.5)	65 (0.4)	856 (5.2)
2011. 3	214 (1.3)	612 (3.6)	579 (3.4)	89 (0.5)	901 (5.3)
2012. 3	190 (1.1)	656 (3.8)	584 (3.4)	78 (0.4)	847 (4.9)
2013. 3	197 (1.1)	683 (3.8)	557 (3.1)	66 (0.4)	791 (4.5)
2014. 3	167 (0.9)	634 (3.4)	551 (3.0)	78 (0.4)	789 (4.3)

주: (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3월.

퇴장하는 연령대에서 증가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성재민(2014)은 시간제 근로의 증가가 사회 전반적인 시간제 고용관행의 확산과는 무관하며, 시간제가 많았던 부문의 전반적인 고용성장과도 큰 관련성이 없이 특정 인적 특성이나 일자리에 집중된 고용관행의 변화에 따른 성장이었음을 분석하였다.

현재 시간제 근로<sup>1)</sup>에는 다른 근로형태가 포함되어 있다.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어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 비전형 근로, 시간제 근로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속하면 비정규직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중복계산되기 때문에 한시적 근로이거나 비전형 근로이면서 시간제 근로일 수 있다. 따라서 한시적 근로와 비전형 근로와 중복되지 않고 시간제 근로에만 해당하는 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을 한시적 근로나 비전형 근로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순수 시간제 근로라 정의한다.

<표 5>는 시간제 근로와 중복되어 있는 근로형태를 제외한 순수 시간제 근로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근로형태와 중복을 제거한 순수 시간제 근로는 2014년 3월 900천 명으로 전체 시간제 근로의 절반에 가까운 47.0%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14년이 최고치로 2007년 34.4%에서 금융위기를 거치는 2009년을 제외한 대부분 기간에서 빠르게 증가해 추세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1) 통계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시간제 근로자는 “직장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 동일 종류 업무 수행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표 5〉 시간제 근로와 순수 시간제 근로 추이

(단위: 천 명,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시간제 근로		1,232	1,301	1,316	1,525	1,532	1,701	1,757	1,917
중복을 제거한 순수 시간제 근로		424 (34.4)	556 (42.8)	526 (40.0)	663 (43.5)	668 (43.6)	743 (43.7)	776 (44.2)	900 (47.0)
연령 분포	15~24세	104	160	160	193	207	221	227	257
	25~34세	86	109	71	116	97	106	102	133
	35~54세	171	200	200	238	236	271	287	282
	55세 이상	63	86	96	117	128	146	161	229

주: ( )안은 시간제 근로자 중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3월.

〈표 6〉의 순수 시간제 근로의 연령구성 분포를 보면, 각 연도 순수 시간제를 100으로 봤을 때, 2014년 기준 15~24세와 55세 이상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시간제 근로의 분포와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순수 시간제 근로의 55세 이상의 구성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핵심연령대인 25~54세는 감소하고 있어 고령자에서 순수 시간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6〉 시간제 근로와 순수 시간제 근로의 연령분포 추이

(단위: 천 명, %)

		2007. 3	2008. 3	2009. 3	2010. 3	2011. 3	2012. 3	2013. 3	2014. 3
시간제 근로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24세	15.5	19.4	18.3	17.1	19.7	18.5	19.0	19.0
	25~34세	17.1	15.4	13.1	13.3	11.7	12.6	10.6	11.2
	35~54세	45.6	42.8	44.0	41.4	40.7	38.4	36.9	33.7
	55세 이상	21.8	22.3	24.6	28.3	27.9	30.5	33.6	36.1
순수 시간제 근로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24세	24.5	28.8	30.4	29	30.9	29.8	29.2	28.5
	25~34세	20.3	19.6	13.4	17.5	14.5	14.2	13.1	14.7
	35~54세	40.4	36	38	35.9	35.4	36.4	36.9	31.3
	55세 이상	14.8	15.5	18.2	17.6	19.2	19.6	20.7	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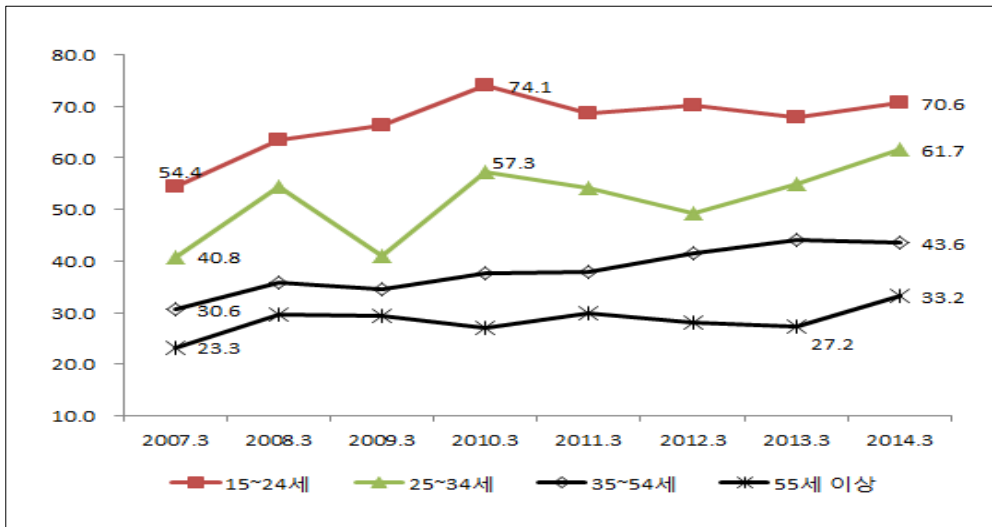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3월.

한편 각 연령대의 시간제 근로 가운데 순수 시간제 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연령대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그림 3 참조). 특히 노동시장 진입연령인 15~24세는 순수 시간제 근로 비중이 가장 많으며 2007년 이후 증가해 2014년 70.6%를 기록하였다. 이들은 주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나 단순노무직 같은 단순서비스업에 종사하며 비공식고용

의 형태에 있다. 25~34세도 시간제 근로 가운데 순수 시간제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데, 이들은 주로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에 대부분 몰려있다. 반면 55세 이상 중고령층에서는 2014년 33.2%로 예년에 비해 증가하기는 했지만, 시간제 근로 가운데 순수 시간제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중고령층에서는 다른 근로형태와 시간제 근로가 중복되어 집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상당수가 기간제 근로에 몰려있음을 확인했다.

[그림 3] 연령대별 순수시간제 비중 추이

(단위 : %)



주: 각 연령대별 시간제 근로 가운데 순수 시간제 근로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3월.

### Ⅲ. 특성별 비정규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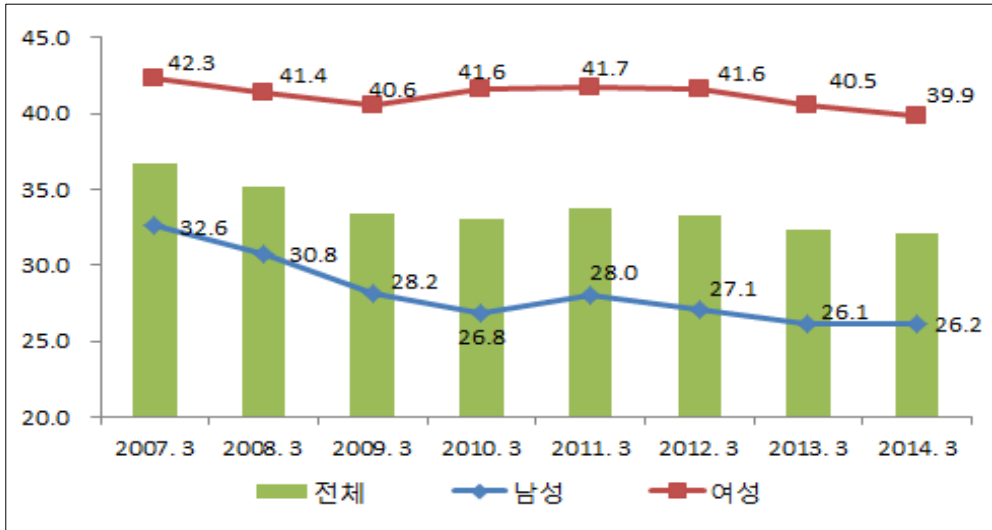
#### 1. 중고령자 중심으로 비정규직 증가

[그림 4]의 각 성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추이를 보면, 2007년 남성은 32.6%에서 추세적 감소를 이어가며 2014년 26.2%를 기록해 2007년 대비 6.1%p 감소했다. 반면, 여성은 2007년 42.3%에서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2014년 39.9%를 기록했다. 남성에 비하면 여성은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40% 내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그림 4] 성별 비정규직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3월.

2014년 3월 기준 여성 비정규직은 3,119천 명으로 남성 비정규직 2,734천 명에 비해 규모가 더 많다(표 7 참조). 국제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는 남성과 여성의 비정규직 규모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남성은 2007년에서 2014년 234천 명이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여성은 372천 명이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를 성별·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여성은 25~34세의 감소가 크게 나타난 반면, 55세 이상 여성 고령층에서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한편 남성은 25~54세는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감소했으나 55세 이상,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정규직 증가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월 → 2014년 3월 변화를 보면, 남성은 비정규직이 87천 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93천 명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연령별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남성 25~34세는 비정규직이 기존의 감소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 41천 명 감소한 반면, 35~54세는 기존의 감소 추세를 뒤집고 58천 명 증가하였다. 반면, 여성은 기존의 감소 추세를 그대로 이어 25~34세에서 2천 명 감소하였고, 35~54세에서 37천 명 감소하였다.

정리하면, 장기적 추세에서 여성과 고령자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현상은 2014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추세적 감소를 보이던 남성 핵심연령인 35~54세에서 기존 추세를 뒤집고 비정규직이 증가하였으며, 여성 35~54세에서는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증감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성별·연령별 비정규직 비중 변화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그림 5 참조). 먼저 남성을 보면, 비정규직이 증가했던 40~54세에서 2013년 → 2014년 비정규직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비중 변화는 2007년 수준에는 미치지 않은 수준이다. 또 남성 고령층 중 60~64세는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했다. 반대로 여성은 2013년 대비 비정규직 규모가 소폭 감소했던 연령층 가운데 25~29세, 35~39세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줄어들었다.

〈표 7〉 각 성별·연령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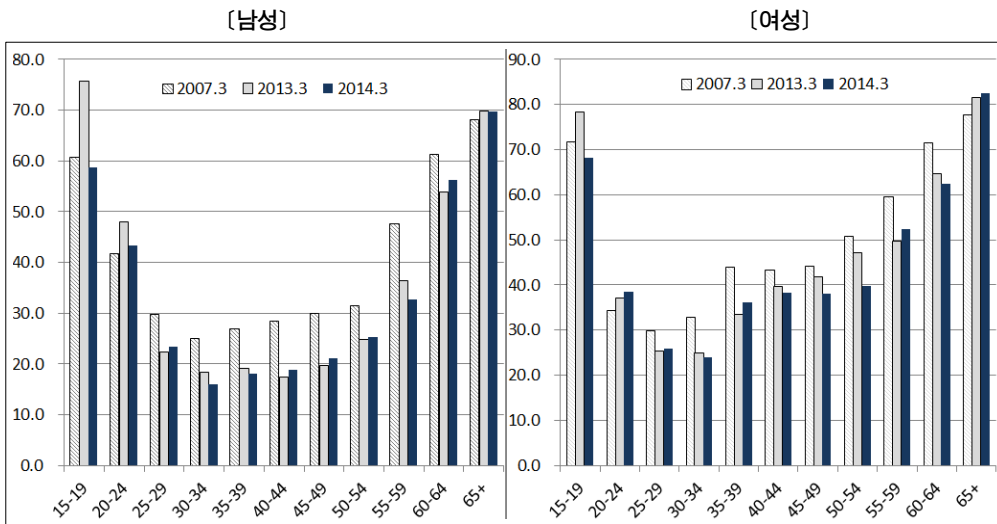
(단위: 천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3→ 2014	2007→ 2014
남성	전 체	2,968	2,843	2,626	2,554	2,750	2,690	2,648	2,734	87	-234
	15~24세	220	220	186	193	237	222	259	264	5	44
	25~34세	749	705	656	579	592	559	532	491	-41	-258
	35~54세	1,372	1,296	1,179	1,119	1,200	1,144	1,077	1,135	58	-237
	55세 이상	627	622	604	664	721	764	781	845	65	218
여성	전 체	2,805	2,794	2,748	2,943	3,021	3,119	3,084	3,177	93	372
	15~24세	337	348	328	331	325	349	345	364	19	27
	25~34세	609	543	514	549	574	535	496	494	-2	-115
	35~54세	1,392	1,423	1,403	1,463	1,497	1,526	1,457	1,420	-37	28
	55세 이상	467	480	502	600	625	709	785	898	113	43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3월.

〈그림 5〉 성별·연령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의 연도별 변화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3월.

## 2. 근속연수별 비정규직의 변화

<표 8>을 통해 고용형태별로 근속기간을 1년 미만과 1년 이상으로 나누어 변화를 살펴 보도록 한다. 2014년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2013년 대비 모두 증가했으나, 증가규모는 1년 이상 근속이 훨씬 컸다. 이러한 변화는 비정규직의 1년 이상 근속자 가운데 반복갱신과 시간제 근로의 영향 때문이며, 특히 반복갱신자의 기여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규직은 1년 이상 근속자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한편 2014년 3월 비정규직은 1년 미만 근속자가 19천 명 증가에 그쳤다. 기대불가자와 비전형 근로에서 감소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만큼 시간제 근로(92천 명)에서 크게 증가한 영향이 작용했다고 보인다.

<표 8> 고용형태별 · 근속기간별 추이

(단위: 천 명)

		규 모							증 감						
		정규 직	비정 규직	한시근로			비전 형	시간 제	정규 직	비정 규직	한시근로			비전 형	시간 제
				기간 제	반복 갱신	기대 불가					기간 제	반복 갱신	기대 불가		
1년 미만	2007. 3	2,769	3,284	1,355	131	318	1,481	927	-	-	-	-	-	-	-
	2008. 3	2,648	3,150	1,044	39	454	1,433	949	-121	-135	-311	-92	136	-48	22
	2009. 3	2,572	3,148	1,230	7	384	1,375	983	-76	-2	186	-32	-70	-58	35
	2010. 3	2,824	3,216	1,214	83	321	1,341	1,141	252	68	-16	76	-63	-34	158
	2011. 3	2,764	3,216	1,169	120	300	1,420	1,088	-60	-0	-45	37	-21	79	-54
	2012.. 3	2,777	3,103	1,188	97	264	1,334	1,149	13	-113	19	-23	-36	-86	61
	2013. 3	2,562	3,072	1,218	66	286	1,255	1,165	-215	-31	30	-31	22	-79	16
	2014. 3	2,664	3,092	1,231	96	236	1,206	1,257	102	19	14	31	-50	-49	92
1년 이상	2007. 3	7,189	2,488	1,259	416	162	763	305	-	-	-	-	-	-	-
	2008. 3	7,708	2,488	1,249	190	272	898	352	519	-1	-10	-226	110	134	47
	2009. 3	8,130	2,225	1,330	16	212	790	333	422	-262	80	-173	-60	-107	-19
	2010. 3	8,295	2,282	1,175	243	166	837	383	165	56	-155	227	-46	47	50
	2011. 3	8,530	2,555	1,296	341	144	891	444	235	273	121	98	-22	54	61
	2012.. 3	8,835	2,706	1,366	314	165	926	552	305	151	71	-27	21	35	108
	2013. 3	9,449	2,660	1,376	183	202	953	592	614	-47	10	-131	37	26	40
	2014. 3	9,821	2,820	1,357	314	166	945	659	372	160	-19	131	-37	-8	6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3월.

## IV. 비정규직 임금 변화

<표 9>와 <표 10>은 근로형태별 임금을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수준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4년 3월 비정규직 규모는 소폭 증가했지만 비중은 줄어들은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은 2013년 3월보다 평균적으로 상승하였다. 2014년 비정규직의 지난 3개월(1~3월) 동안의 월평균 임금은 145.9만 원으로 작년 3월에 비해 3.3% 증가하였고,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6.1만 원으로 2.7% 증가해 비정규직의 임금상승률이 정규직의 임금상승률을 상회하였다. 이에 따라 월평균 임금으로 본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2013년 3월 55.7%에서 2014년 3월 56.1%로 그 격차가 소폭 축소되었다.

세부 근로형태를 보면, 모든 근로형태에서 임금은 증가했다. 한시적 근로 중 정규직의 근로조건과 상당히 유사한 반복갱신의 임금상승률은 3.3%로 정규직 상승률을 상회했고, 기대불가(1.9%)와 기간제(0.4%)는 낮은 수준에서 임금이 증가했다. 비정규직 가운데 비교적 월평균 임금수준이 높은 파견(10.4%)과 특수고용(7.5%)은 2013년에는 임금이 감소했지만, 2014년에는 비교적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했다.

<표 9> 고용형태별 임금수준(월평균)

(단위: 만 원, %)

	2008. 3	2009. 3	2010. 3	2011. 3	2012. 3	2013. 3	2014. 3
임금근로자	1,811 ( 5.1)	1,854 ( 2.4)	1,946 ( 5.0)	2,026 ( 4.1)	2,113 ( 4.3)	2,171 ( 2.7)	2,234 ( 2.9)
정규직	2,104 ( 6.0)	2,167 ( 3.0)	2,289 ( 5.7)	2,368 ( 3.4)	2,454 ( 3.7)	2,533 ( 3.2)	2,601 ( 2.7)
비정규직	1,272 (-0.1)	1,232 (-3.1)	1,253 ( 1.6)	1,356 ( 8.3)	1,432 ( 5.6)	1,412 (-1.3)	1,459 ( 3.3)
한시근로	1,441 ( 0.0)	1,403 (-2.6)	1,417 ( 0.9)	1,551 ( 9.5)	1,628 ( 5.0)	1,591 (-2.2)	1,645 ( 3.4)
한시적							
기간제	1,524 ( 6.6)	1,490 (-2.2)	1,384 (-7.1)	1,487 ( 7.5)	1,602 ( 7.7)	1,593 (-0.6)	1,599 ( 0.4)
근로							
반복갱신	1,956 ( 1.6)	1,121 (-42.7)	2,177 ( 94.3)	2,294 ( 5.4)	2,225 (-3.0)	2,208 (-0.8)	2,282 ( 3.3)
기대불가	1,020 ( 6.2)	1,043 ( 2.3)	1,068 ( 2.4)	1,134 ( 6.1)	1,208 ( 6.5)	1,269 ( 5.1)	1,294 ( 1.9)
비전형							
비전형	1,191 ( 9.5)	1,130 (-5.1)	1,219 ( 7.9)	1,266 ( 3.8)	1,349 ( 6.6)	1,370 ( 1.5)	1,446 ( 5.6)
파견	1,481 (11.7)	1,432 (-3.3)	1,391 (-2.8)	1,462 ( 5.1)	1,485 ( 1.6)	1,445 (-2.7)	1,596 (10.4)
용역	1,143 (12.8)	1,082 (-5.3)	1,160 ( 7.2)	1,201 ( 3.5)	1,255 ( 4.5)	1,325 ( 5.6)	1,371 ( 3.4)
근로							
특수고용	1,623 (19.2)	1,457 (-10.2)	1,610 ( 10.5)	1,745 ( 8.4)	1,819 ( 4.2)	1,759 (-3.3)	1,891 ( 7.5)
가내근로	731 (22.6)	553 (-24.3)	413 (-25.4)	742 (79.5)	600 (-19.1)	629 ( 4.9)	680 ( 8.2)
일일근로	900 ( 0.9)	867 (-3.7)	945 ( 8.9)	955 ( 1.1)	1,079 (12.9)	1,119 ( 3.7)	1,216 ( 8.7)
시간제 근로	558 ( 3.0)	557 (-0.2)	554 (-0.6)	588 ( 6.2)	621 ( 5.6)	651 ( 4.9)	671 ( 3.0)

주: (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3월.

한편 가내근로(8.2%)와 일일근로(8.7%)는 8% 수준에서 임금이 증가했고, 용역근로(3.4%)와 시간제 근로(3.0%)는 3% 수준의 임금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월평균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을 이용해 시간당 임금으로 전환하여 상대임금격차를 분석해 본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2014년 3월 65.5% 수준으로 2013년 3월 대비 2.0%p 증가했다. 상대임금격차는 2007년 이후 연속적으로 빠르게 벌어지다 2011년과 2012년에 소폭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2013년 들어 격차가 커졌고, 2014년 격차는 다시 소폭 줄어든 상태이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상대임금 수준(73.2%)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시적 근로 중 기간제 근로는 2014년 3월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 수준이 1.1%p 낮아졌으며, 비정규직 근로형태 중 상대임금격차가 벌어진 유일한 근로형태이다. 기간제 근로의 상대임금 수준은 2010년 67.4%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두 번째 낮은 수준인 68.6%를 기록하였다. 한편 반복갱신과 기대불가는 2014년 3월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 수준이 각각 0.8%p, 0.5%p 높아졌다. 반복갱신은 비정규직 근로형태 중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 기대불가는 정규직 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2011년 이후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2007년과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형 근로는 2013년 3월 대비 2014년 3월의 상대임금격차가 축소되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다.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는 각각 2.4%p, 1.4%p 높아졌고, 특수고용은 4.5%p, 일일근로는 4.4%p 상대임금격차가 축소되었다. 가내근로의 경우 2013년에 비해 24.5%p 격차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형 근로에서 상대임금격차가 다소 축소되었으나 용역근로와 가내근로를 제외한 파견근로, 특수고용, 일일근로는 여전히 국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시간당 임금으로 봤을 때 2014년 3월 시간제 근로는 정규직 임금의 57.4%로 2013년 3월에 비해 2.8%p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규직 임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2009년 이전 수준에 비해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 2014년 비정규직 임금이 증가하고 정규직의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면서 상대임금격차는 소폭 줄어들었지만, 상대적으로 일자리 질이 좋다고 보기 어려운 용역근로와 가내근로를 제외한 모든 근로형태에서 상대임금격차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수준보다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왜 아직까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격차가 감소하지 못하고 있는가?

상대임금격차가 국제금융위기 이전보다 커져서 여전히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Juhn, Murphy & Pierce<sup>2)</sup>가 개발한 분석방법을 활용해 임

2) Blau, F. and L. Kahn(1996), "Wage Structure and Gender Earnings Differential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Economica* 63(250)에서 이용된 방법을 따랐다.

〈표 10〉 고용형태별 임금수준(시간당)

(단위 : %)

		2007. 3	2008. 3	2009. 3	2010. 3	2011. 3	2012. 3	2013. 3	2014. 3
정규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73.2	67.3	63.9	62.3	65.2	66.6	63.5	65.5
한시적 근로	한시근로	77.7	71.9	69.5	67.4	70.5	72.3	68.3	69.0
	기간제	78.2	77.4	74.0	67.4	69.3	72.8	69.7	68.6
	반복갱신	98.0	93.7	66.5	96.7	98.7	91.4	87.7	88.5
	기대불가	51.8	47.7	50.4	47.7	48.2	50.7	51.1	51.6
비전형 근로	비전형	60.4	60.4	55.4	56.2	56.8	57.9	56.5	60.0
	파견	68.5	68.9	71.3	64.5	63.2	66.8	60.8	63.1
	용역	48.5	50.4	47.7	48.8	48.6	49.2	50.6	52.0
	특수고용	80.0	84.5	73.1	75.5	81.0	80.1	74.2	78.7
	가내근로	44.6	46.7	37.0	25.8	42.9	34.9	33.8	58.3
	일일근로	53.4	50.2	45.0	45.8	45.2	47.7	47.8	52.1
시간제 근로		72.9	63.1	59.5	55.4	57.6	56.8	54.6	57.4

주 :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경우 상대수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3월.

금액차 분해를 해보았다. 이 분해 방법에 따르면 시간에 따른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변화는 설명변수에 의해 관찰된 요소의 변화와 관찰되지 않은 요인에 근거한 변화로 구분될 수 있다. 관찰된 요소의 변화는 다시 분포 자체의 변화와 가격 변화로 분해될 수 있으며, 미관찰된 요인의 변화도 미관찰 요인의 분포 변화와 미관찰된 요인의 가격 변화로 각각 분해될 수 있다.

설명변수에 의해 관찰된 요소의 구성 변화는 예를 들어 노동시장 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남성 30~40대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줄고 정규직 비중이 증가하는 구성의 변화를 의미한다. 남성 핵심연령의 비정규직 감소는 비정규직의 평균적인 임금이 줄어드는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증가하게 된다. 혹은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이 증가하게 된다면, 비정규직의 평균적인 임금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에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설명변수에 의해 관찰된 요소의 가격효과는 이를테면 같은 교육수준이나 같은 연령대의 정규직에게 비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많이 올려주는 경우가 해당된다.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구조가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가격구조 변화가 모두 차별의 변화로 환원되지는 않지만, 차별 요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차별의 강화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벌어졌다면 가격구조 변화의 역할

이 큰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설명변수들로 회귀식을 추정하게 되면 잔차가 남게 되는데, 이 잔차에는 설명변수들(관찰된 요소들)로 설명되고 남은 임금변동 부분이 있을 것이다. 설명되고 남은 임금에서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잔여임금격차라 하고 미관찰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잔여 임금격차도 구성 변화와 가격 변화를 구분할 수 있다.

미관찰 요인의 구성 변화는 예를 들어 소위 ‘스펙’의 경우 데이터상에서 세밀하게 구분할 수 없어 미관찰 요소가 되는데, 과거에 비해 현재 스펙이 좋은 사람이 정규직 일자리를 더 쉽게 가질 수 있는 반면, 스펙이 낮은 사람들은 정규직을 가지기 어려운 노동시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자. 이러한 변화로 정규직에는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다수를 점하게 되고, 비정규직에는 과거보다 스펙이 낮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구성 변화가 생겼다면, 비정규직의 평균 잔여임금 수준이 더 떨어질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미관찰 요소인 스펙의 분포 변화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늘이는 방향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만약 기업이 과거에 비해 현재 스펙 좋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게 된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스펙의 분포변화가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안에 스펙 좋은 사람이 많다면 정규직 중 스펙이 좋은 사람이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어 정규직 안에서 임금불평등이 증가할 것이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과 잔여임금격차가 증가하게 된다면 미관찰 요소인 스펙의 가격 변화에 따른 임금격차 증가가 된다.

비교대상 시기는 2007년 3월에서 2014년 3월 변화, 2013년 3월에서 2014년 3월 변화로 하였다. 2008년은 금융위기가 시작되며 경기침체가 있었던 시기로 이로 인한 고용변동이 컸다. 경기침체가 오면 우선적으로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비정규직이므로, 이미 상대임금이 떨어지는 등의 변화가 2008년을 기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위기로 침체가 시작되기 전인 2007년 3월을 비교의 시작 시점으로 삼았다.

<표 12>를 통해 2007년에서 2014년의 상대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9.5%p(로그 포인트)만큼 정규직-비정규직 상대임금격차는 증가했다. 임금격차 증가분(9.5%p)을 100으로 볼 때 통제변수를 무엇으로 이용하는가에 관계없이 총구성 변화가 총가격 변화를 압도해 임금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가격 변화는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에서 2014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증가한 것이 비정규직 내부 인적구성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는 의미가 된다.

어떤 인적구성의 변화가 임금격차 증가에 중요했는지를 보면, 연령분포의 변화만으로 7.6%p가 증가했고, 여기에 성별 분포를 추가하면 9.1%p, 학력과 근속을 추가하면 10.8%p 임금격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는 2007년에서 2014년 취약계층인 여성과

고령자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남성 핵심연령대에서 규모와 비중이 감소한 인적특성 측면의 영향만으로도 전체 임금격차 증가분의 상당부분이 설명된다는 의미이다.

2013년에서 2014년 두 기간 동안 상대임금격차는 감소했는데, 인적구성(연령, 성, 학력)의 변화는 반대로 격차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근속이나 산업, 직업을 포함할 때 격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비정규직 인적특성이 주변화되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표 11〉 시기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변화 분해(시간당 임금)

		통제변수의 구성변화로 설명되는 부분	통제변수의 가격변화로 설명되는 부분	미관측 구성변화로 설명되는 부분	미관측 가격변화로 설명되는 부분	총구성변화 효과	총가격변화 효과
'07.3 ~ '14.3	연령	0.076	-0.010	0.060	-0.031	0.136 (142.8)	-0.041 (-42.8)
	연령 · 성	0.091	-0.014	0.045	-0.026	0.136 (142.9)	-0.041 (-42.9)
	연령 · 성 · 학력	0.089	-0.028	0.048	-0.014	0.137 (143.5)	-0.042 (-43.5)
	연령 · 성 · 학력 · 근속(가)	0.108	-0.053	0.046	-0.006	0.154 (161.1)	-0.058 (-61.1)
	(가)+직업 · 산업	0.103	-0.041	0.036	-0.003	0.139 (145.9)	-0.044 (-45.9)
'13.3 ~ '14.3	연령	0.011	-0.014	-0.025	-0.005	-0.014 (41.5)	-0.019 (58.5)
	연령 · 성	0.008	-0.016	-0.019	-0.005	-0.011 (34.8)	-0.021 (65.2)
	연령 · 성 · 학력	0.000	-0.017	-0.012	-0.004	-0.013 (38.4)	-0.020 (61.6)
	연령 · 성 · 학력 · 근속(가)	-0.004	-0.017	-0.009	-0.003	-0.013 (38.8)	-0.020 (61.2)
	(가)+직업 · 산업	-0.007	-0.015	-0.008	-0.002	-0.015 (46.8)	-0.017 (53.2)

주: 각 연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 실질시간당 임금에 로그를 취해 종속변수로 이용했으며, 연령은 연령 및 연령 제곱, 근속은 근속개월 그대로, 여성 비중은 여성더미, 학력은 중졸 이하를 기준으로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더미, 산업은 산업대분류(제조업 기준), 직종은 직종대분류(전문직종사자)로 하여 회귀식을 추정하였으며, 회귀식 추정결과 보고는 원고 분량상 생략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3월.



## V. 맺음말

지금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3월 자료를 이용해 비정규직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변화를 분석했다. 2014년 3월 기준 비정규직 비중은 2007년 3월 조사 이래 추세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비정규직 규모는 2013년 3월 대비 179천 명 증가했지만, 임금근로자 증가폭이 워낙 컸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비정규직 내 근로형태는 빠른 변화가 진행중에 있다. 기간제를 중심으로 한시적 근로가 비정규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시간제 근로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비정규직의 30%를 넘는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시간제 근로 규모가 비전형 근로 규모를 추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간제 근로 가운데 순수 시간제 근로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인적특성은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2007년 이후 여성, 고령자 중심으로 비정규직화가 진행되는 현상은 2014년에도 여전히 진행되었지만, 감소 추세에 있던 남성 35~54세의 비정규직이 규모와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 2014년 비정규직 임금상승률은 월평균 기준으로 3.3% 증가해 정규직 증가율(2.7%)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시간당 임금 기준)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65.5% 수준으로 상대임금격차는 소폭 개선되었다. 근로형태별로 봤을 때 유일하게 기간제 근로의 상대임금격차만 1.1%p 증가하였고, 다른 근로형태는 모두 격차가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2007년 수준(73.2%)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정규직·비정규직 대비 상대임금격차가 2007년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비정규직 내부 인적구성의 변화와 연관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핵심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감소하고 취약계층인 여성과 중고령자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구성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KLI**

### <참고문헌>

성재민(2014), 「여성 시간제 일자리 확산과 함의」, 『노동리뷰』 6월호.

Blau, F. and L. Kahn(1996), “Wage Structure and Gender Earnings Differential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Economica* 63(250).